"방역 어려울수록 민생 더 살펴야"

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서

"2차 추경 집행 속도전…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
일자리, 민생경제 핵심… 취약업종 고용유지 지원 확대
생활물가 안정 집중 노력… 추석 물가 선제 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부처 장관만을 모아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민생회복 방안을 압축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2차 추경 집행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며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출산장려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김철수 도의원 "도내 출생아수 매년 최저 갱신 난임치료,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원해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정읍1·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도내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650명 감소한 8천3백명으로 매년 최저를 갱신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라며 패러다임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현재의 지원정책 대신 출산의사가 있어 난임시술을 받으며 노력 중인 특정대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의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고,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했으며, 실제 도내에서도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6%로, 2018년(4.35%)의 비율과 전 세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매우 빠른 증가추세이다.

하지만, 국가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로, 실제 1회 시술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이며,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험적용 가능 시술횟수마저 제한돼 있어 출산의사가 있어도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난임지원 정책을 타 지자체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화사업으로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고, 12개의 지자체는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세대들의 출산 포기는 경제적문제와 함께 보육문제 때문"이라며 "출생률 감소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북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8%이고, 인기가 높은 공립유치원의 대기 순번은 수십 명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3년간 도내 근교 유치원 7개원이 폐교된데 반해, 도시 내에서는 10곳이 개원했다"며 "폐교를 이용, 자연·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체험위주의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통학문제는 어울림학교버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에 도정 및 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대에 맞는 저출산 정책으로 전환 지원해 양육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가 마련한 '전북도 청년정책 활성화 위한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도의회서 간담회 개최
청년허브센터 사업 소개

전북도의회 문승우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군산4)은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전북도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청년들의 건의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활성화 방향과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 사업내용을 청취하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이 2021년도 전북도 청년정책 추진상황과 청년정책 활성화 방향을 설명하고, 박규민 전북청년허브센터 팀장이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허브센터의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이정하, 백정록, 함정훈, 김찬미, 장선재, 김은총)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꼭 필요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최훈열 도의원 "잼버리 성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더불어민주당)은 세계잼버리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인원 5만여명과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지만 숙박시설은 미비하다"며 잼버리의 성공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해 전북도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개관이후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의 리모델링도 하지 않아 객실 안이 낡고 시설·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며, 도민혈세로 건립되었음에도 도민의 혜택은 전무해 숙박객이 감소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호텔 위탁경영 입찰에서 최근 5년간 100실 이상 직접경영 또는, 수탁 운영 등의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지역업체 가점 적용은 물론이고, 공동도급조차 허용되지 않아 지역업체는 지원조차 못한 채 10년째 외지업체가 위탁경영 했다"며 올 12월 31일 위탁경영 종료를 앞두고 있을 입찰의 조건개선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오평근 도의원, 조례안 발의… 위원회 설치·운영 등 담아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고용불안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도내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평근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필수업무 종사자 덕분이며,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올해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에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고,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도 동참하는 등 평소에도 필수업무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1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지난 28일 도의회 의장단과 의원 및 사무처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720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단과 의원 및 사무처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720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대오(익산1)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도정질문에서 도의회와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등 공직사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우리 전북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최영심 도의원 발의 '버스 차령 연장제 전면 검토 건의안' 채택

국토교통부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밀집도 최소화를 권고하는 정부와 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국민 안전은 물론 환경과 상용차 산업을 위협하는 역행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선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를 줄이며,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이 불가피해졌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령을 연장해 차량 교체 시기를 1년 연장해주는 임시방편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량교체 연장정책으로 근본 대책을 외면한 국토부의 행보를 바로잡고자 '국민 안전과 환경 및 상용차 산업 위협하는 버스 차령 연장 제도 전면 검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유호상 기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5년 마다 수립 의무화

조동용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전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지난 4월 수립되고 이어, '전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전면 정비되는 등 전북도의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도의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제383회 임시회에 '전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2008년 제정, 2011년 한 차례의 개정 이후 전혀 실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조례를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주로 지난 10년 동안 바뀐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전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 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자전거보험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과 함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오늘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 정책간담회

그린뉴딜 친환경 정책 인식 개선방안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30일 오후 2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촌태양광산업협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도당 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한국농촌태양광산업협회 김상준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상민 농어민위원장은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이전 정책과의 괴리로, 사업주 및 관련 업체들의 대처가 어려운게 현실이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에 대한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간담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태양광산업협회 김상중 회장은 "농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한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이 농촌에 또 하나의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는 농민들이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농촌 건축물과 소막사 지붕 등 토지 효율성 높은 곳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 피해예방 제도 신설, 분양사기, 부실시공, 계약 미이행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뉴딜 친환경 정책으로서의 인식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